

글로벌 산업구조 재편과 우리의 대응전략

VIP REPORT

희망자녀수와 출산자녀수간의 격차해소가 저출산의 해법!

- '저출산 원인과 대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주원, 이장균, 이철선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7
Tel (02)2072-6242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02-2072-624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희망자녀수와 출산자녀수간의 격차해소가 저출산의 해법!
- ‘저출산 원인과 대책’에 대한 설문 조사를 중심으로 -

Executive Summary	i
1. 문제제기	1
2.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조사결과	3
3. 정부와 기업의 과제	12
■ HRI 경제 지표	17

1. 문제 제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5명('09)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OECD는 저출산 문제로 인해 2012~2025년에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4%대로 급감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렇듯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국가차원에서 잠재성장률 하락, 재정건전성 악화, 연금에 대한 국민 부담을, 기업차원에서는 노동력 부족을 유발하는 등 한국경제에 총체적 문제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서울·경기지역 20~30대 직장인 56명을 대상으로 '저출산 원인과 대책'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저출산 원인에 관한 조사 결과

(문제점) 20~30대 직장인들은 평균 1.81명의 자녀를 희망하고 있었으나, 출산자녀수인 합계출산율은 1.15명('09)으로 0.76명의 격차가 존재하였다. 희망자녀 수에서 2명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58.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명(24.0%), 3명(13.5%), 0명(4.3%)의 순이었다. 특이할만한 점은 삶의 질에 있어 '결혼이 필수'라는 응답은 54.4% 였지만 '자녀가 필수'라는 응답은 70.6%로 16.2%p 더 많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0.76명의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가정차원에서 희망하는 수만큼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는 자녀양육 시, 소요되는 '과도한 비용'(64.7%)과 '시간 부족'(12.1%) 때문이었다. 자녀양육비용 중 가장 부담되는 것은 '사교육비'(57.9%)가 1위였고, 다음으로 '유치원 등 보육위탁비'(17.3%), '의료비 등 양육비'(10.5%) 순이었다. 시간부족에서는 '맞벌이'(63.8%), '미흡한 휴가·휴직'(18.9%), '과도한 근무시간'(14.0%) 때문이었다.

둘째, 정부차원의 출산정책에서는 '임신·출산비용의 확대지원'(43.5%), 보육정책에서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33.2%)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육정책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료 면제'(24.8%)가 2위, '직장 보육시설 설치 시, 기업지원'(18.4%) 3위로 나타나 보육시설 관련 정책에 대한 요구가 76.4%에 달했다.

셋째, 기업차원에서는 '일과 가정의 병립'에 대한 인식 부족이 제시되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우리기업의 노력에 대해 응답자의 82.0%가 부정적이었으며, 이유로는 복지비용 증가로 인한 기업의 회피(45.7%)와 기업의 무관심(19.3%)을 들었다. 또한 가정에서 아빠도 자녀를 키워야 한다는 가치관 정착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병행에 대한 기업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2.9%에 달했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공조 체제 구축에 대해서는 76.9%가 '효과가 클 것'이라고 응답했다.

3. 정부와 기업의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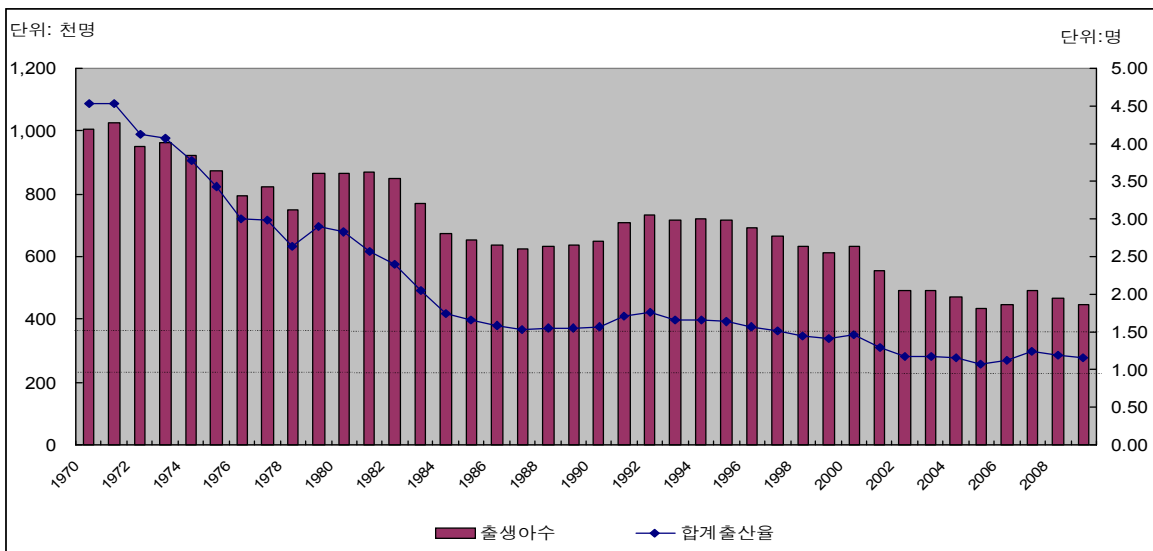
정부와 기업은 공조 체제를 구축, 저출산 해소를 위한 장기 투자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정부는 첫째, 과도한 양육비용 절감을 위해 만 5~6세 아동의 무상교육 전면 확대, 둘째, 소득대체를 확대를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 셋째,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지급, 넷째 유연근무제 도입기업의 가족친화기업 인증 확대를 검토할 만하다. 또한, 기업도 첫째, '일과 가정의 병립'을 위한 가족친화경영 도입, 둘째, 정부와의 공조를 통한 유연근무제 확산, 셋째, 만 4세 이하 유아 대상의 직장 내 보육시설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한편, 정부와 기업 모두, 결혼보다 자녀를 중시하는 세태를 반영, 미혼모 등 자녀를 키우면서도 사회에 적응해 살아갈 수 있는 문화·제도적 기반 마련과 낙태금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해야 할 것이다.

1. 문제제기

○ 한국의 저출산 현황

- 2009년 한국의 출산율은 1.15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임
- 2010년 OECD 통계연보는 2008년 한국의 합계출산율¹⁾이 2007년 1.25명에서 감소한 1.19명으로 OECD 국가들의 평균 출산율 1.71명보다 낮다고 발표함
- 1984년 2.0명 수준으로 급격하게 감소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1.5명 이하수준으로 감소하더니 2009년에는 1.15명²⁾으로 추락함

< 한국의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1970~2009) >



자료: 통계청, 합계출산율 추이, 2010.

- 저출산 문제는 국가차원에서 잠재성장률 하락, 재정건전성 악화 등을, 기업 차원에서는 노동력 부족을 유발하는 등 한국경제의 총체적 문제임
- OECD³⁾는 2010~2011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회원국 중 가장 높은 4.0%로 높지만, 2012~2025년에는 저출산으로 인해 2.4%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함

1)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

2) 통계청, 2010.

3) OECD '경제 전망보고서', 2010.

의망재녀수와 출산재녀수간의 격차애소가 저출산의 예방!

- 이외에 국가경제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는 재정건전성 악화, 연금 등 국민부담 가중을 유발하고, 기업측면에서는 노동력의 수와 질의 저하를 불러올 것임
- 본고에서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과 정부의 과제를 도출함
 - 조사내용으로는 2~30대 기혼·미혼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결혼관 및 자녀관, 저출산 문제의 원인, 그리고 정부정책 평가와 기업의 과제 등을 조사하였음

○ 조사 개요

- (조사 설계) 서울경기 지역 20~30대 직장인 561명을 대상으로 '저출산 원인과 대책'에 대한 전화 및 Fax 조사를 실시함
 - 성별, 연령, 결혼여부에 대해 쿼터할당을 통한 임의표본추출법을 이용, 2010년 6월 21일부터 7월 6일까지 15일 간 조사함
 - 표본추출에 따른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4.14\%$ 이었음
- (응답자 특성) 남성 대비 여성, 미혼 대비 기혼, 30대 대비 20대 비율은 약 6:4였으며, 연령이 낮은 직장인들로 소득 3,000만 원 이하가 67.0%로 높았음

< 응답자 특성 >

구분	사례 수(명)		비중(%)	
응답자 수(명)	561		100.0	
성별	남성	204	36.4	
	여성	357	63.6	
연령	20대	241	43.0	
	30대	320	57.0	
결혼여부	기혼	343	61.1	
	미혼 (자녀유무)	소계	218	38.9
		무	57	26.1
		유	161	73.9
연소득	3,000만 원 미만	373	67.0	
	3,000~5,000만 원 미만	158	28.4	
	5,000만 원 이상	26	4.6	
직업	대기업 직장인	134	23.9	
	중소기업 직장인	310	55.3	
	공무원	117	20.8	

2.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조사결과

○ (문제집) 20~30대 직장인들은 평균 1.81명의 자녀를 희망하고 있었으나,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0.76명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었음

- (희망자녀 수) 전체 응답자의 평균 희망자녀수는 1.81명이었으며, 2명의 자녀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58.2%로 가장 많았음

- 평균 희망자녀 수 1.81명=[(희망자녀 0명×응답자 24명)+(희망자녀 1명×응답자 134명)+(희망자녀 2명×응답자 324명)+(희망자녀 3명×응답자 75명)]/557명
- 2명의 희망 자녀는 미혼자(59.1%)나 기혼자(56.7%)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자녀가 없는 기혼자들도 2명의 자녀를 원하는 경우가 47.3%로 가장 많았음

< 희망 자녀수 >

구분	전체	미혼자	기혼자				
			소계	자녀 없음	자녀 1명	자녀 2명	
소계	557명	340명	217명	55명	92명	69명	
희망하지 않음	4.3%	6.2%	1.4%	5.5%	0.0%	0.0%	
희망자녀	1명	24.0%	20.9%	29.3%	34.5%	47.8%	0.0%
	2명	58.2%	59.1%	56.7%	47.3%	47.8%	75.4%
	3명	13.5%	13.8%	12.9%	12.7%	4.3%	24.6%

- (삶의 질과 자녀와의 관계) 10명 중 7명이 자녀가 필수라고 응답함

- 삶의 질에 자녀가 필수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66.1%)보다는 남성(78.4%), 미혼(63.0%)보다는 기혼(82.5%), 그리고 연소득이 높을수록 많았음

< 삶의 질과 자녀와의 관계 >

구분	전체	성별		결혼여부		연소득		
		남성	여성	기혼	미혼	3천만 원 미만	3천~5천만 원미만	5천만 원 이상
소계	561명	204명	357명	218명	343명	373명	158명	26명
필수 ○	70.6%	78.4%	66.1%	82.5%	63.0%	67.7%	74.0%	88.5%
필수 ×	29.4%	21.6%	33.9%	17.5%	37.0%	32.1%	26.0%	11.5%
필수 ×	27.3%	17.6%	32.8%	16.1%	34.4%	30.8%	22.8%	7.7%
필수 ×	2.1%	3.9%	1.1%	1.4%	2.6%	1.3%	3.2%	3.8%

의망재녀수와 출산재녀수간의 격차애소가 저출산의 예방!

- (삶의 질과 결혼과의 관계) 10명 중 5.4명이 삶의 질에 '결혼이 필수'라고 응답해 '자녀가 필수'라고 응답한 사람들보다 1.6명이 더 적었음
 - 삶의 질에 결혼이 필수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46.2%)보다 남성(68.6%)이, 미혼(49.3%)보다는 기혼(62.4%)이, 그리고 연소득이 높을수록 많았음

< 결혼과 삶의 질 >

구분	전체	성별		결혼여부		연소득		
		남성	여성	기혼	미혼	3천만 원 미만	3천~5천만 원미만	5천만 원 이상
소계	561명	204명	357명	218명	343명	373명	158명	26명
필수 ○	54.4%	68.6%	46.2%	62.4%	49.3%	51.2%	59.5%	65.4%
필수 ×	45.6%	31.4%	53.8%	37.6%	50.8%	48.8%	40.5%	34.6%
× 그저 그럼	44.4%	29.9%	52.7%	35.8%	49.9%	47.7%	39.2%	30.8%
× 필요 없음	1.2%	1.5%	1.1%	1.8%	0.9%	1.1%	1.3%	3.8%

- (삶의 질에 결혼이 부정적인 이유) 가족과 관련된 '부부·자녀부양에 대한 심리적 부담'(20.2%)보다는 '자기실현(43.5%)', '경제적 부담(25.7%)' 등 개인의 삶과 관련된 이유가 1, 2위였음
 - '자기실현에 부담이 되어서'라는 의견은 남성(32.8%)보다는 여성(47.1%)이, 기혼(35.4%)보다는 미혼(47.4%)에서 더 많았음
 - '결혼, 주택마련 등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는 의견은 여성(20.1%)보다는 남성(42.2%)이, 미혼(23.4%)보다는 기혼(30.5%)에서 더 많았음

< 결혼이 삶의 질에 부정적인 이유 >

구분	전체	성별		결혼여부	
		남성	여성	기혼	미혼
소계	253명	64명	189명	82명	171명
사회활동 등 자기실현에 부담이 되어서	43.5%	32.8%	47.1%	35.4%	47.4%
결혼, 주택마련 등 경제적 부담 때문에	25.7%	42.2%	20.1%	30.5%	23.4%
부부, 자녀부양에 대한 심리적 부담 때문에	20.2%	18.8%	20.6%	25.6%	17.5%
부모 등 주변인들의 힘든 결혼생활 때문에	6.7%	6.3%	6.9%	6.1%	7.0%
기타	4.0%	0.0%	5.3%	2.4%	4.7%

- (미혼자 결혼의지) 20대는 10명 중 1명이, 30대는 10명 중 2명이 결혼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 직장인(12.0%)이 대기업 직장인(18.1%), 공무원(19.0%)보다 결혼의지가 낮아 직업의 안정성이 낮을수록 결혼의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결혼 의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		직업		
		남성	여성	20대	30대	대기업 직장인	중소기업 직장인	공무원
소계	343명	104명	239명	216명	127명	72명	208명	63명
유무	85.5%	84.6%	85.8%	89.4%	78.8%	81.9%	88.0%	81.0%
	14.5%	15.4%	14.2%	10.6%	21.2%	18.1%	12.0%	19.0%

○ 가정차원의 원인 :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사교육비 등 과도한 비용과 맞벌이로 인한 시간부족이 부담

- (주된 원인) '자녀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과도한 비용'(64.7%)때문이라는 의견이 1위였고, 다음으로 '시간 부족'(12.1%), '보육기관 문제'(9.1%)의 순이었음
- '자녀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과도한 비용'에서는 여성(57.7%)보다 남성(77.0%)에서 더 많았으며,
- '자녀양육/출산을 위한 시간 부족'에서는 남성(7.4%)보다 여성(14.8%)이 더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었음

< 저출산의 주요 원인 >

구분	전체	성별		연소득		
		남성	여성	3천만 원 미만	3천~5천만 원미만	5천만 원 이상
소계	561명	204명	357명	373명	158명	26명
자녀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과도한 비용	64.7%	77.0%	57.7%	65.7%	61.4%	69.2%
자녀 양육/출산을 위한 시간부족 때문에	12.1%	7.4%	14.8%	10.7%	17.1%	3.8%
보육기관의 수 부족과 낮은 서비스 때문에	9.1%	5.9%	10.9%	7.8%	12.0%	7.7%
여성의 사회진출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7.1%	6.4%	7.6%	6.4%	8.2%	11.5%
자녀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문화 때문에	6.8%	3.4%	8.7%	9.1%	1.3%	7.7%
기타	0.2%	0.0%	0.3%	0.3%	4.0%	0.0%

의망재녀수와 출산재녀수간의 격차애소가 저출산의 예방!

- (비용 중 부담항목) '사교육비'(57.9%)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유치원 등 보육위탁비'(17.3%), '의료비 등 양육비'(10.5%)의 순이었음
- 소득이 많을수록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는 반면, 소득이 적을수록 의료비 등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부양비용 중 가장 부담되는 항목 >

구분	전체	결혼여부		연소득		
		기혼	미혼	3천만 원 미만	3천~5천만 원미만	5천만 원 이상
소계	561명	218명	343명	373명	158명	26명
사교육비	57.9%	55.5%	59.5%	56.6%	59.5%	69.2%
유치원 등 보육위탁 비용	17.3%	21.6%	14.6%	17.7%	17.1%	15.4%
의료비 등 양육비	10.5%	8.7%	11.7%	13.1%	5.7%	3.8%
대학학자금	9.8%	7.8%	11.1%	9.4%	10.1%	7.7%
자녀의 주택미련 비용	3.0%	4.6%	2.0%	2.1%	5.7%	0.0%
자녀의 결혼비용	1.4%	1.8%	1.2%	1.1%	1.9%	3.8%

- (월 소득 대비 자녀부양비 비중) '20~40%'라는 의견이 49.2%로 가장 많았고, 40%이상 일 것이라는 의견도 37.2%에 달함
- 약 40%이상 지출된다는 의견에서 남성(26.5%)보다는 여성(43.3%)이, 기혼(20.2%)보다는 미혼(48.1%)이, 그리고 소득이 적을수록 높았음
- 특히, 출산당사자인 여성과 향후 출산가능성이 높은 미혼자들에게서 월 소득의 약 40%이상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인식이 높은 것은 저출산의 지속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 월 소득 대비 자녀부양비 비중 >

구분	전체	성별		결혼여부		연소득		
		남성	여성	기혼	미혼	3천만 원 미만	3천~5천만 원미만	5천만 원 이상
소계	559명	204명	355명	218명	341명	371명	158명	26명
20% 미만	13.4%	22.1%	8.5%	23.0%	7.4%	9.2%	20.9%	30.8%
20~40% 미만	49.2%	51.5%	47.9%	56.4%	44.6%	47.2%	53.2%	50.0%
40% 이상	37.2%	26.5%	43.3%	20.2%	48.1%	43.6%	25.4%	19.2%

- (시간부족 원인) '맞벌이로 인한 시간부족'(63.8%)이 1위였고, '직장의 미흡한 휴가·휴직제도'(18.9%)가 2위, '직장의 과도한 근무시간'(14.0%)이 3위였음
 - 맞벌이로 인한 시간부족은 대기업 직장인(53.8%)보다 중소기업 직장인(66.1%), 공무원(69.0%)에서 많았음
 - 특히, '맞벌이로 인한 시간부족'은 소득활동을 계속하는 가운데 자녀를 돌보아줄 시간이 없다는 점에서 근무형태 차원에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음

< 양육시간 부족의 원인 >

구분	전체	성별		직업		
		남성	여성	대기업 직장인	중소기업 직장인	공무원
소계	556명	199명	357명	130명	310명	116명
맞벌이로 인한 시간부족 때문에	63.8%	61.3%	65.3%	53.8%	66.1%	69.0%
직장의 미흡한 휴가·휴직제도 때문에	18.9%	13.1%	22.1%	24.6%	17.4%	16.4%
직장의 과도한 근무시간 때문에	14.0%	22.1%	9.5%	16.2%	14.8%	9.5%
유치원 등의 짧은 근무시간 때문에	3.2%	3.5%	3.1%	5.4%	1.6%	5.2%

- (보육기관 개선과제) '거주지/직장 근처의 보육기관 부족'(50.4%)이 1위였고, 다음으로 '보육서비스의 낮은 품질'(26.0%), '전문 인력부족'(14.6%) 순이었음
 - 소득이 높을수록 '거주지/직장 근처의 보육기관 부족'에 대한 불만이 높았고, 3,000만원 미만 소득자에서 '전문 인력부족'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았음
 - 소득이 높을수록 '거주지/직장 근처의 보육기관 부족'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은 맞벌이 가구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보육기관 개선과제 >

구분	전체	결혼여부		연소득		
		기혼	미혼	3천만 원 미만	3천~5천만 원미만	5천만 원 이상
소계	561명	218명	343명	373명	158명	26명
거주지/직장 근처의 보육기관 부족	50.4%	53.7%	48.4%	49.3%	51.9%	53.8%
보육서비스의 낮은 품질	26.0%	25.7%	26.2%	23.3%	32.9%	23.1%
전문 인력 부족	14.6%	11.0%	16.9%	16.6%	10.8%	11.5%
낙후한 시설	7.3%	7.8%	7.0%	9.1%	3.2%	7.7%
기타	1.6%	1.8%	1.5%	1.6%	1.3%	3.8%

의망가녀수와 출산가녀수간의 격차애소가 저출산의 예방!

○ 정부차원의 원인: 출산정책에서는 ‘임신·출산비용의 확대지원’이, 보육정책에서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 부족

- (출산정책) 단기적으로는 ‘임신·출산비용 확대지원’(43.5%) 등 경비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의 휴직기간 연장’(31.2%)이나 ‘남성의 육아 휴직제도 도입’(19.3%)과 같이 장기적으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정책은 2, 3위였음

<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정부의 출산정책 >

구분	전체	결혼여부		연소득		
		기혼	미혼	3천만 원 미만	3천~5천만 원미만	5천만 원 이상
소계	561명	218명	343명	373명	158명	26명
임신·출산비용 확대지원	43.5%	38.1%	46.9%	46.6%	38.6%	26.9%
여성의 육아 휴직기간 연장	31.2%	35.3%	28.6%	31.9%	31.0%	23.1%
남성의 육아 휴직제도 도입	19.3%	18.8%	19.5%	16.6%	22.8%	38.5%
기타	2.1%	3.7%	7.0%	1.6%	2.5%	7.7%
낙태감소를 위한 캠페인 전개	1.4%	1.4%	1.5%	1.3%	1.9%	0.0%
자녀 양육비 지원	1.2%	1.4%	1.2%	0.5%	1.9%	3.8%
사교육비 감소	0.7%	0.5%	0.9%	0.8%	0.6%	0.0%
보육시설 확장과 지원	0.5%	0.9%	0.3%	0.5%	0.6%	0.0%

- (보육정책)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33.2%), ‘보육시설 이용료 면제’(24.8%), ‘직장 보육시설 설치 시 기업지원’(18.4%) 등 시설정책이 76.4%에 달함

· 정부의 탄력근무제 실시(14.3%)는 4위에 그쳤으나, 소득이 높을수록 탄력근무제 실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정부의 출산정책 >

구분	전체	결혼여부		연소득		
		기혼	미혼	3천만 원 미만	3천~5천만 원미만	5천만 원 이상
소계	560명	218명	342명	372명	158명	26명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33.2%	33.0%	33.3%	34.4%	32.3%	19.2%
보육시설 이용료 면제	24.8%	32.6%	19.9%	25.5%	23.4%	26.9%
직장보육시설 설치 시, 기업지원	18.4%	14.7%	20.8%	18.5%	18.4%	15.4%
탄력근무제(파트타임/재택근무 등) 실시	14.3%	13.8%	14.6%	12.9%	17.1%	15.4%
다자녀 가구 주택 구입 시 우대	5.9%	2.3%	8.2%	5.4%	5.7%	11.5%
셋째 자녀 대학입학, 취업 시 우대	3.4%	3.7%	3.2%	3.2%	3.2%	7.7%

○ 기업차원의 원인 : '일과 가정의 병립'에 대한 인식 부족

- (기업의 노력 평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우리기업의 노력에 대해서 응답자의 82.0%가 부정적으로 평가함

- 저출산 문제에 대한 기업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기혼(22.5%), 대기업 직장인(21.6%)들이었지만 약 30%를 넘지는 못했음

< 저출산 문제에 대한 기업의 노력 평가 >

구분	전체	결혼여부		직업		
		기혼	미혼	대기업 직장인	중소기업 직장인	공무원
소계	561명	218명	343명	134명	310명	117명
긍정적	18.0%	22.5%	15.2%	21.6%	13.5%	25.6%
부정적	82.0%	77.5%	84.8%	78.4%	76.5%	74.4%

- (부정적인 이유) '복지비용 증가로 인한 기업의 회피'(45.7%)가 1위였고, 다음으로 '기업의 무관심'(19.3%), '정부의 기업지원 부족'(17.6%)의 순이었음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 노력에 대한 부정적 이유 >

구분	전체	결혼여부		연소득		
		기혼	미혼	3천만 원 미만	3천~5천만 원미만	5천만 원 이상
소계	460명	169명	291명	305명	133명	19명
복지비용 증가로 인한 기업의 회피	45.7%	46.2%	45.4%	46.6%	42.9%	47.4%
기업의 저출산에 대한 무관심	19.3%	22.5%	17.5%	17.4%	20.3%	42.1%
저출산과 관련한 정부의 기업지원 부족	17.6%	18.9%	16.8%	16.1%	22.6%	10.5%
기업의 여성고용 회피	13.0%	8.3%	15.8%	15.4%	9.8%	0.0%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기업홍보 부족	4.3%	4.1%	4.5%	4.6%	4.5%	0.0%

- (양성 자녀 양육) '아빠도 자녀를 키워야 한다'는 가치관 정착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병행에 대한 기업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2.9%였음

- 다음으로 '아빠의 자녀보육 휴가실시 등 정부차원의 노동제도 개선'이 36.7%였고, 사회차원인 '엄마중심 자녀보육 가치관 전환'이 10.4%로 3위였음
- '일과 가정의 병행에 대한 기업인식 전환' 요구는 남성(55.0%), 소득이 많을수록 높게 나타남

< 양성 자녀양육을 위한 개선과제 >

구분	전체	결혼여부		연소득		
		남성	여성	3천만 원 미만	3천~5천만 원미만	5천만 원 이상
소계	556명	200명	356명	370명	156명	26명
일과 가정의 병행에 대한 기업인식 전환	52.9%	55.0%	51.7%	50.8%	56.4%	61.5%
아빠의 자녀보육 휴가 등 노동제도 개선	36.7%	40.0%	34.8%	37.0%	35.9%	34.6%
엄마 중심의 자녀보육 전통가치관 전환	10.4%	5.0%	13.5%	12.2%	7.7%	3.8%

- (도입 필요 정책) 단기적인 임신 출산정책보다는 장기적인 보육제도 도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직장 보육시설 등 자녀보육 지원제도’(37.7%)가 1위였으며, ‘보육을 위한 휴가 및 휴직제도’(22.1%), ‘재택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21.3%)가 2, 3위였음
- 5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는 보육을 위한 탄력적 근무제도 경향이 타 소득자보다 강했고, 소득이 적을수록 출산장려금 등 경제적 지원제도 선호가 높았음

< 출산을 향상을 위해 기업이 도입해야할 정책 >

구분	전체	결혼여부		연소득		
		기혼	미혼	3천만 원 미만	3천~5천만 원미만	5천만 원 이상
소계	560명	217명	343명	373명	157명	26명
직장보육시설 등 자녀 보육지원제도	37.7%	34.6%	39.7%	37.0%	38.9%	34.6%
보육을 위한 휴가 및 휴직제도	22.1%	25.3%	20.1%	20.6%	26.8%	15.4%
재택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	21.3%	23.5%	19.8%	22.0%	17.8%	34.6%
출산 장려금 등 경제적 지원제도	18.8%	16.6%	20.1%	20.1%	16.6%	15.4%
기타	0.2%	0.0%	0.3%	0.3%	0.0%	0.0%

- (정책공조 기대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기업의 공조정책을 편다면 효과가 크겠느냐?’라는 의견에 76.9%가 긍정적으로 응답함

- 공무원(78.6%), 중소기업 직장인(74.5%)보다 대기업 직장인(81.2%)들이 더 긍정적이었음

< 저출산 정책에 관한 기업과 정부의 공조에 대한 공감정도 >

구분	전체	직업			연소득		
		대기업 직장인	중소기업 직장인	공무원	3천만 원 미만	3천~5천 만 원미만	5천만 원 이상
소계	560명	133명	310명	117명	372명	158명	26명
긍정적	76.9%	81.2%	74.5%	78.6%	76.9%	78.5%	69.2%
부정적	23.1%	18.8%	25.5%	21.4%	23.1%	21.6%	30.8%

- (정부와 기업의 공조정책) '기업은 육아기에 근무시간을 줄이는 대신 정부는 감소한 소득액을 어느 정도 지원하는 제도'의 선호가 24.8%로 가장 높았음

- '기업은 여성의 출산 후 복직보장, 정부는 복직보장 기업 지원'(24.4%), 그리고 '기업은 보육시설 설치, 정부는 직원파견 등 운영지원'(22.5%)이 2,3위였음
- '기업은 육아기에 근무시간을 줄이는 대신 정부는 감소한 소득액을 어느 정도 지원하는 제도'에서는 여성(28.0%)과 소득이 적을수록 선호가 높았으며,
- '기업은 여성의 출산 후 복직보장, 정부는 복직보장 기업 지원'은 3천만 원 이상 소득자들에서 선호가 높았음

< 정부와 기업이 공조해야할 출산율 정책 >

구분	전체	성별		연소득		
		남성	여성	3천만 원 미만	3천~5천 만 원미만	5천만 원 이상
소계	561명	204명	357명	373명	158명	26명
기업은 육아기에 근무시간 줄이기, 정부는 감소한 소득액을 지원	24.8%	19.1%	28.0%	28.4%	18.4%	11.5%
기업은 출산 후 복직보장, 정부는 복직보장 기업 지원	24.4%	15.7%	20.1%	23.3%	27.2%	26.9%
기업은 보육시설 설치, 정부는 직원파견 등 운영지원	22.5%	27.0%	19.9%	20.1%	27.8%	19.2%
기업은 아빠육아휴가제, 정부는 고용보장	11.9%	16.7%	9.2%	12.6%	9.5%	19.2%
기업은 보육비 지원, 정부는 도입기업의 세제지원	10.0%	15.2%	7.0%	8.6%	12.0%	15.4%
기업은 재택근무, 정부는 기업에게 사무기기 구입 보조지원	6.4%	6.4%	6.4%	7.0%	5.1%	7.7%

3. 정부와 기업의 과제

- (정책방향) 정부와 기업은 공조체제를 구축, 국민들의 희망자녀수와 실제 출산자녀수간의 격차해결을 위해 방어보다는 투자 지향의 정책을 고려해야함
 - 자녀지원, 임신부 및 모성보호, 근로지원, 다자녀가구, 보육시설지원 등 현 저출산 정책은 단기 비용중심 중심의 방어적 경향이 큼
 - 방어정책은 출산율 감소의 연착륙에는 효과가 있지만 획기적인 출산율 상승 등 저출산 성향을 전환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현 정책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정부와 기업은 성장을 위한 미래 인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장기적인 투자지향의 저출산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저출산 관련 지원 정책 >

구분	내용	특성
자녀지원	- 신생아: 선천성 대사 이상 및 난청검사,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 - 영유아: 필수예방 접종 및 건강검진 지원, 차등보육 경비지원 만 5세 아동 보육교육비 지원 등 - 초중등고생 :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비용지원
임산부 및 모성보호	- 난임부부: 일정소득 기준 난임 부부 시험관 수술 50% 3회 지원 - 임신부: 임신출산 진료비, 산모도우미 등 지원 - 일하는 부모지원: 산전 후 휴가, 유사산 휴가제도, 배우자 출산휴가	- 비용지원
근로지원	- 출산·육아이후 직업교육 등 노동시장 복귀지원 - 육아휴직 급여: 최대1년 월 50만원 정부가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근무시간 감소에 따른 급여지급 - 근로시간 단축장려금: 단축허용 사업자(월 1인당 20만원 지급) -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육아휴직 근로자의 대체인력 고용시 지급	- 양육을 위한 소득대체 - 사업장 확대
다자녀 가구	- 주거안정 지원: 공공분양주택 등 우선 부여(10%) - 생활비: 3자녀 이상 가구 전기요금 감액, 다자녀 추가 공제, 국민연금 출산크리딧, 다자녀 우대 카드, 자동차 취득세등 감면	- 세금감면
다양한 가정	- 신혼부부: 연간 건설되는 주택물량 중 공공주택 15% 등 우선공급 - 입양 및 장애아 가정: 양육수당 또는 양육보조 및 의료비 지원 - 농어촌가구: 연3,700만 원 이하 만 6세 자녀를 둔 경우 양육비지원	- 우선권 및 비용 지원
보육시설 지원	- 설치비용 용자: 근로자 육아에 필요한 설치비용 장기저리 용자 - 설치비용 무상지원: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 시 최대 2억 원 지원 - 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최대 1인당 80만원 지원	- 비용 지원
기업	-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 탄력근무제, 휴가·휴직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을 지원하는 기업을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 재정적 지원 無

자료: 노동부, 일과 가정의 행복한 균형 만들기, 2010., 보건복지부, 저출산 지원정책

○ 정부의 과제: 양육비용 절감과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에 초점을 맞추어, 만 5~6세 아동 무상교육 전면 확대, 시간제 근로제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산,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지급을 고려

- 첫째,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보육시설 이용료 면제, 보육시설의 서비스 등을 고려, 만5~6세 아동 보육기관의 무상교육을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 한국소비자연맹이 2009년 5~6월 조사한 서울소재 사립유치원의 연평균 납입금은 430만 원으로 2010년 연간 국공립 대학등록금 447만원⁴⁾과 비슷한 수준임
 - 유치원 등 육아교육이 무상인 선진국들의 합계출산율은 1.7명 이상이지만, 만 5세, 소득하위 20%미만 가구에 무상교육을 지원하는 한국은 1.15명 수준임
 - 사교육비 등 과도한 양육비와 보육시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만 5~6세 취학 전 아동의 보육시설 교육을 전면 무상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임

< OECD 국가들의 무상교육 정책 >

구분	대상	무상교육 기간	무상 교육 내용	취학 저보육재정 (GDP 대비)	합계 출산율 (2010년)
호주	- 4~6세	-	- 유아학교 중심, 반일제	- 0.45%	- 1.83명
영국	- 3~4세	- 2년	- 주당 12.5시간 38주간 무상보육	- 0.47%	- 1.84명
프랑스	- 3~6세	- 3년	- 보육시설, 가정보육, 유아학교	- 1.0%	- 1.89명
벨기에	- 2.5세	- 3.5년	- 가정보육시설, 유치원, 유아학교	- 0.5%	- 1.77명
미국	- 4~5세	- 1년	- 유치원 무상교육, 반일제	- 0.4%	- 2.09명

자료: 육아정책 개발센터, OECD 국가들의 육아정책 개관, 2008

- 둘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을 통해 여성의 출산 전의 소득대체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 한국은 최대 1년간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휴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출산 전 소득대체율이 낮으며, 복직 등의 불안요소를 유발함
 - 반면, 네덜란드 공공부문은 전일제 무급형 육아휴가보다 시간제 육아휴가를 권장하고, 평균이상(115%)의 급여를 지급해 자녀양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4)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대학 알리미, 2010.5.

의망재녀수와 출산재녀수간의 격차애소가 저출산의 예방!

- 현재 사용주가 허락하는 대상자에 한해 이용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신청방법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 근로시간 단축허용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월 1인당 20만원 장려금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자에게 전환하여 제도를 확산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만함
- 셋째, 저출산 해결을 위한 기업과의 공조체제 구축을 위해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재정적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08년부터 정부는 '일과 가정의 병립'을 위해 가족친화기업 인증 제도를 운영하면서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으나 확산이 느린 상황임
 - 가족친화기업은 여성고용 등 경제활동 제고 및 저출산 문제에도 기여가 큰바, 법인세 등을 지원받는 '사회적 기업'과 같이 재정적 인센티브 지급이 필요
 - 현행 직장보육시설을 위한 부동산 취득 시 세제 지원에 그치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사업장 단위에서 기업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시간 근로제를 도입한 기업들의 가족친화기업 인증확대를 통해 유연 근무제를 여성들의 양육을 위한 경제활동 지속의 기반으로 삼아야 할 것임
- 가족친화기업 인증 시, 기업문화 조성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배점이 낮은 탄력적 근무제의 비중을 확대해 시간제 근무제 등의 확산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시간제 근로제가 도입된 네덜란드의 경우, '1.5 생계모델'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제고와 출산을 해소, 양육비용을 충당하고 있음

< 네덜란드의 1.5 생계모델 >

구분	내 용
정의	- 1.5 생계모델 : 가구 1인 전일제(주 40시간)+1인 시간제(주 30시간)
도입배경	- 노동인력 부족과 높은 보육비용, 보수적인 남성부양 중심의 생계모델
특징	- 일자리 나누기: 시간제 근로 도입과 시간제 노동 차별 철폐(바세나르 협약('82)) - 남성은 전일제 중심의 '일', 여성은 시간제로 '일'과 '가족 돌봄'의 역할분담 - 교육보조금의 경우 고용주가 지원하는 대신 정부는 고용주 세금 감면
지원	- 출산휴가 및 시 시간제 육아휴가 시 평균 이상의 급여지급(115%수준) - 4~5세의 육아학교 중심 보육시설 이용률이 95%(무상교육 2년)
효과	- 6세 미만 아동을 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30%대에서 60%대로 증가(89~99) - 출산율 제고(1.74명) 및 실업률 감소(3% 대유지)

자료: 육아정책 개발센터, OECD 국가들의 육아정책 개관, 2008

○ 기업의 과제: 저출산 문제의 인식전환을 위한 가족친화경영 도입과 자녀 양육시간 지원을 위한 유연근무제 및 직장 내 보육시설 도입을 검토

- 첫째, 가족친화경영⁵⁾의 도입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과 우수인재의 확보에 주력하는 인식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
 - 조사결과, '일과 가정의 병행'에 대한 기업인식 전환과 저출산 문제의 기업 노력에 대한 낮은 평가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요구가 높았음
 - 국내 기업들은 해외 선진기업들이 임직원의 충성도 강화와 우수인재 확보 등을 위해 도입한 일하기 좋은 기업(Great Work Place)의 확대 개념인 가족친화경영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해외 선진기업의 가족친화경영 사례 >

분야	기업(국가)	사례
육아지원	- 포드(미국)	- 개인 카운슬링, 전문보육사 지원 등 육아지원책 중심
	- 베넷세(일본)	- 메뉴화된 복리정책 중 스스로 선택하는 카페테리아플랜 도입
휴가제도	- CSFB(미국)	- 첫 출산 시 20주 유급휴가, 복직 시 파트타임→정규직 전환
	- 엡손(일본)	- 육아휴가/개호휴가제도 기간을 법정기간 보다 연장/분할사용
	- NEC(일본)	- 육아와 개호를 위해 육아 단시간 근무/개호 제도 운영
가족지원	- 액센츄어(미국)	- 직원이 출장 시 가족들이 함께 동승할 수 있는 제도 운영
	- SD&M(독일)	- 직원 선택으로 정규직↔파트타임으로 전환 가능
근무제도	- 마쓰다(일본)	- 코어타임(AM 10시~PM 3시) 없는 플렉스 타임 운영
	- HP(미국)	- 'e-Tools' 등 직장 네비게이션 도구 보급을 통한 재택근무
	- IBM(미국)	- 연령별 교육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컴퓨터를 보육시설에 제공
사회공헌 근로자 지원	- 오사카가스(일본)	- '노사추진위원회' 설립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마련
	- 토토기기(일본)	- 사내위원회 설립으로 육아/개호제도에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

자료: 여성가족부, 기업 성장의 지름길, 가족친화 경영, 2007.

- 둘째, 직원의 지속적인 양육시간 확보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차원을 위해서 정부와의 공조 하에 시간제 근무 등 유연근로제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직무분석과 임금테이블이 없는 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은 업무연속성 단절, 복잡한 인사관리, 생산성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기업은 유연근무제 도입의 기본조건인 직무분석과 임금테이블 작성 등을 노동부의 임금체계 개선과 관련된 컨설팅 지원 사업을 통해 구축할 필요가 있음

5) 남녀근로자가 다양한 프로그램, 정책, 훈련 및 기업문화를 통해 직장과 가정 일을 조화롭게 수행하고, 자녀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는 '주도적인 기업전략'(보건복지부, 출산가족친화 기업경영 확산방안 연구, 2006)

의망재녀수와 출산재녀수간의 격차애소가 저출산의 예방!

- 특히 시간제 근로는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 심각해지고 있는 기업의 숙련기술자들의 고령화와 맞물려 있는 만큼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 한국의 유연근로제 도입 현황 >

구분	내 용
단시간 근로	- 주 30시간 미만 기준으로 OECD 평균은 15.5%이나 한국은 9.8%('08) 수준
시차출근제	- 2008년 기준 일반기업 5.6%, 공공부문 2009년 12월 기준 3.46%
재택근무제	- 2008년 기준 일반기업 3.4%,
기타	- 집중근로시간제 3.6%, 직무공유제 6.0%, 파트타임 전환제 3.8%

주: 관계부처합동, 유연근무제 확산 방안, 국가고용전략회의, 2010. 2.18.

- 셋째, 만 4세 이하 영육아의 보육을 위해 정부의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활용, 직원들의 자녀양육 환경의 개선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만약 정부가 만 5세 이상 유아들의 보육을 위한 유치원·어린이 집의 무상교육을 추진하더라도 만 4세 이하 영육아 보육은 여전히 문제로 남게 됨
 - 이와 관련 기업이 단독으로, 그리고 정부와의 협조 하에 도입해야 할 중점 정책으로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의견이 조사결과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직장 내 보육시설의 설치는 출근 시,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기고 퇴근 시 데려가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대안으로 평가됨
 - 현재, 정부의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자금 및 인력의 인건비에 대한 지원 사업이 진행적인 바, 이를 통한 사업 진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만함
- 이외, 정부와 기업은 사회적으로 결혼보다 자녀를 중시하는 세태를 반영, 결혼은 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문화적 기반을 구축해야함
 - 조사결과, 20~30대 직장인들은 개인의 삶의 질에 있어 결혼보다는 자녀가 필수라는 의견이 더 많았음
 - 결혼 없이 아이를 낳아 키우는 미혼모들이 사회에 적응해 살아갈 수 있는 제도·문화적 기반형성과 낙태금지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노력해야할 것임

이철선 연구위원 (2072-6242, cslee@hri.co.kr)

HRI 經濟 指標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구 분		2008 ^P	2009 ^P					2010 ^E			
			1/4	2/4	3/4	4/4	연간	1/4	2/4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2.3	-4.3	-2.2	1.0	6.0	0.2	8.1	7.2	5.3	
	민간소비 (%)	1.3	-4.4	-1.0	0.7	5.8	0.2	6.3	3.7	4.1	
	건설투자 (%)	-2.8	2.8	5.1	4.4	5.0	4.4	2.3	-2.7	2.2	
	설비투자 (%)	-1.0	-23.1	-17.3	-7.0	13.3	-9.1	29.9	29.0	13.0	
대외거래	통관기준	경상수지 (억 \$)	-58	86	131	104	106	427	12	-	130
		무역수지 (억 \$)	-133	30	170	102	124	426	34	156	230
	수출 (억 \$)	4,220	744	904	948	1,040	3,635	1,013	1,211	4,390	
		증감률 (%)	(13.6)	(-25.2)	(-21.1)	(-17.6)	(11.7)	(-13.9)	(36.2)	(34.0)	(20.8)
	수입 (억 \$)	4,353	714	740	848	929	3,231	980	1,055	4,160	
		증감률 (%)	(22.0)	(-32.7)	(-35.6)	(-31.0)	(1.4)	(-25.8)	(37.2)	(42.7)	(28.8)
소비자물가 상승률 (%)		4.7	3.9	2.8	2.0	2.4	2.8	2.7	2.6	3.1	
실업률 (%)		3.2	3.8	3.8	3.6	3.3	3.6	4.7	3.5	3.6	
국제유가 (평균, Dubai, \$/배럴)		94	44	59	68	75	62	76	79	81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03	1,418	1,286	1,239	1,168	1,276	1,143	1,166	1,110	

주: P(Preliminary)는 잠정실적치, E(Expectation)는 전망치.